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8
----------	-----

제출연월일 : 2003. 9.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강화하며, 문화재수리공사의 시공품질 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진흥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문화재보호조례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시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구분을 위하여 전자와 후자를 통칭할 때에는 시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라.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 함(안 제24조의3).

마.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허가사항, 행정명령, 신고사항, 시지정문화재의 공개, 관람료의 징수, 직권에 의한 조사 등 문화재관련법 준용규정은 삭제 함(안 제16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32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의10, 제20조, 제25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1조, 제55조, 제58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35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문화재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 2003. 7. 11. ~ 7. 31. / 의견결과 : 접수 1건(반영)

3) 규제심사 : 폐지 2 (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가지정문화재),
완화 1 (손실의 보상)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보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 “시지정문화재”를 “시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이하 “시문화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내지 제8호중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각각 “시문화재”로 하고, 동조제3호중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시지정무형문화재”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법 제8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중 “제20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중 “시지정문화재”를 “시문화재”로,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문화재수리용역 시공의 평가 등) ①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이하 “용

역사업 등”이라 한다)를 발주한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당해 용역사업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용역사업 : 사업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

2. 문화재수리공사 :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수리 공사에 대하여는 그 역사적·학술적·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자 또는 수리공사업자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하고 우대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및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3(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문화재 수리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4인

2.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인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의 평가대상이 되는 용역사업 등의 선정 및 평가

2.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의 지정

⑤시장은 문화재의 원형고증 또는 문화재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위

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기술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촉위원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9조중 “시지정문화재”를 각각 “시문화재”라 한다.

제26조·제28조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중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5조중 “제23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시지정문화재”를 “제24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시문화재”로 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지정문화재”를 각각 “시문화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38조”를 “법 제41조”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준용) 제39조의 규정은 시문화재의 지정 또는 가지정을 위하여 행하는 조사 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제1항·제4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각각 “시문화재”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용역사업 등의 시공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종 전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지정문화재(이하 “지정문화재”라 한다) 및 문화재자료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보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이하 “시문화재”라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해제 2.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해제 4.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5. (생략) 6.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환경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 7.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	제5조(기능) ----- -----. 1. 시문화재 ----- 2. 시문화재 ----- 3. 지정무형문화재 ----- 4. 시문화재 ----- 5. (현행과 같음) 6. 시문화재 ----- ----- 7. 시문화재 -----

종 전	개 정
<p>8. <u>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p> <p>9. (생략)</p> <p>제1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p> <p>①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20조(가지정) ①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할</p>	<p>8. <u>시문화재</u> -----</p> <p>-----</p> <p>-----</p> <p>---.</p> <p>9. (현행과 같음)</p> <p>제1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p> <p>< 삭제 ></p> <p>②----- 법 제8조-----</p> <p>-----</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p>< 삭제 ></p>
<p><u>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이 긴급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시장은 시지정문화재로 가지정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u></p> <p>②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가지정 취지를 통보한 날부터 발생한다.</p>	

종 전	개 정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정된 문화재는 가지정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지정이 없으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제22조(준용) 제16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문화재자료에 이를 준용한다.</p> <p>제2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시장은</p> <p>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분명(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공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시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고자 하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고시하고,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관리단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2조(준용) ----- 제19조----- -----.</p> <p>< 삭제 ></p>

종 전	개 정
<p>④<u>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u> <u>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⑤<u>관리단체가 시지정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u> <u>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시 또는 자치구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02. 10. 04 조례 제3125호></u></p> <p>⑥제20조의 규정은 관리단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p>	
<p>제24조(수리 등) <u>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u> (<u>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u>)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u>문화재보호법(이하 “법” 이하 한다)</u>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 10. 04 조례 제3125호></p> <p><신 설></p>	<p>제24조(수리 등) <u>시문화재</u>----- ----- ----- -----법----- ----- ----- ----- ----- ----- -----.</p> <p>제24조의2 (문화재수리용역 시공의 평가 등) ①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p>

종 전	개 정
	<p>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이하 ‘용역사업 등’ 이라 한다)를 발주한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발주청” 이라 한다)은 당해 용역사업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1. 문화재수리용역사업 : 사업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p> <p>2. 문화재수리공사 :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p> <p>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수리공사에 대하여는 그 역사적·학술적·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자 또는 수리공사업자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하고 우대할 수 있다.</p> <p>④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종 전	개 정
<p><신 설></p>	<p>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및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4조의3(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이 문화재 수리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4인 2.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인 <p>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③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p> <p>④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의 평가대상이 되는 용역사업 등의 선정 및 평가 2.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의 지정

종 전	개 정
	<p>⑤시장은 문화재의 원형고증 또는 문화재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p> <p>⑥기술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촉위원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⑦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제25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시장은 <u>시지정문화재</u> 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 <u>시문 화재</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허가사항) <u>시지정문화재에 대하여</u>	<삭 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u>시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이를 구역 밖으로 반출 하는 행위</u>	
2. <u>시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u>	

종 전	개 정
<p>3. <u>시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02. 10. 04 조례 제3125호></u></p>	
<p><u>제28조(행정명령) ①시장은 시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2. 10. 04 조례 제3125호></u></p> <p>1. <u>시지정문화재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u></p> <p>2. <u>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u></p> <p>3. <u>기타 시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한 조치</u></p> <p><u>②시장은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u></p>	<p><삭 제></p>

종 전	개 정
<p>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29조(문화재의 매입) 시장은 <u>시지정문화재</u>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유자가 매도하는 문화재를 매입할 수 있다.</p> <p>제32조(신고사항) <u>시지정문화재</u>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p> <p>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p> <p>2. <u>시지정문화재</u>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때<개정 2002. 10. 04 조례 제3125호></p> <p>3.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때<개정 2002. 10. 04 조례 제3125호></p> <p>4. <u>시지정문화재</u>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때</p> <p>5.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p>	<p>제29조(문화재의 매입) ----- <u>시문화재</u> -----</p> <p>-----</p> <p>-----.</p> <p><삭 제></p>

종 전	개 정
<p>6. 시지정문화재가 멸실, 도난 또는 훼손된 때</p> <p>7. 제26조제1호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거나 이를 다시 반입 한 때</p> <p>8.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p> <p>9. 동식물의 종이 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때</p> <p>제34조(손실의 보상) 시장은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제35조(준용) 제23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시지정문화재로 가지정된 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p> <p>제36조(시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시지정문화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2. 10. 04 조례 제3125호></p>	<p>제34조(손실의 보상) ----- ----- -----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제35조(준용) 제24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시문화재----- ----- -----.</p> <p><삭 제></p>

종 전	개 정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02. 10. 04 조례 제3125호></p> <p>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제한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02. 10. 04 조례 제3125호></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2. 10. 04 조례 제3125호></p>	
<p>제37조(관람료의 징수) ①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p> <p>③삭제 <2002. 10. 04 조례 제3125호></p>	<p><삭 제></p>

종 전	개 정
<p>제38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기타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측량·발굴·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뜨기전 또는 해진후에는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p>	<p><삭 제></p>

종 전	개 정
제39조(조사요청) ① <u>시지정문화재</u> 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조사요청) ① <u>시문화재</u> ----- ----- ----- -----.
② 제1항의 조사요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u>시지정문화재</u> 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u>제38조</u>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 ----- <u>시문화재</u> ----- ----- <u>법 제41조</u> ----- -----.
제40조(준용) ① <u>제38조</u> 및 <u>제39조</u> 의 규정은 <u>제15조</u> , <u>제16조</u> , <u>제20조</u> , <u>제21조</u> 의 규정에 의하여 <u>시지정문화재</u> 및 <u>가지정 문화재</u> , <u>문화재자료</u> 를 지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 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준용) ① <u>제39조</u> 의 규정은 <u>시문화재</u> 의 지정 또는 <u>가지정</u> 을 위하여 행하는 조사 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u>시지정문화재</u> 및 <u>문화재자료</u> (보호물, 보호구역과 <u>가지정문화재</u> 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그 새 소유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행한 명령, 지시, 기타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4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u>시문화재</u>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표창)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3조(표창) ----- ----- -----.

종 전	개 정
1. <u>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u> 로 지정된 매장문화재를 발견 신고한 자	1. <u>시문화재</u> ----- -----
2. 관리, 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u>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u> 의 멸실, 도난,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 <u>시문화재</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u> 를 관리·보호·육성할 책임이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보호·육성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4. <u>시문화재</u> ----- ----- ----- -----

관계법령

□ 文化財保護法

제8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제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0.1.12>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

제13조 (가지정) ①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은 그 가지정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2>

제16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경우에 그 문

화재의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문화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④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0.1.12>

제18조의10 (문화재수리용역·시공의 평가 등) ①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당해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발주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및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종전 제18조의10은 제18조의11로 이동<2001.3.28>]

제20조 (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1. 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삭제 <1999.1.29>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

제25조 (행정명령) ①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삭제 <1999.1.29>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필요한 조치

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9, 1999.5.24>

제27조 (신고사항)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0.1.12>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을 때
3.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에 변경이 있을 때
5.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
6. 국가지정문화재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7. 제20조제1호 또는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때
8.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장변경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9. 삭제 <1999.1.29>
10. 삭제 <1999.1.29>
11. 동·식물의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때

제33조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국가지정문화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제한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0.1.12]

제39조 (관람료의 징수)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1995.12.29>

③삭제 <2000.1.12>

④삭제<1995.12.29>

제41조 (직권에 의한 조사)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장·관리·수리 기타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측량·발굴·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출전 또는 일몰 후에는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제55조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에 대

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정임을 알 수 있도록 "지정"앞에 특별
시 또는 당해 광역시나 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⑤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및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제58조 (준용규정) ①제18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시·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9,
2002.12.30>

②제8조,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20조, 제25조, 제27
조, 제33조,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
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본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2001.3.28, 2002.12.30>

□ 文化財保護法施行令

제10조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 소속하에
각각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법 제1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하고자 하는 발주청은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
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기술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
다. 다만,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되는 기술위원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35조 (시·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기준) 시·도지사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文化財保護法施行規則

제11조의3 (문화재청장 소속 문화재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두는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수리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하는 6인
2. 문화재청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1인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기술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 용역사업(이하 이 조에서 "용역사업"이라 한다) 및 문화재수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수리공사"라 한다)의 선정

2. 용역사업 및 수리공사 등의 평가

3.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우수용역업자 및 우수수리업자의 지정

⑥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원형고증 또는 문화재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⑦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2001.9.8]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개정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의 개정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주요골자]

- 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평가를 실시
-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문화재관련 상위법 준용규정(중복)을 삭제함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허가사항, 행정명령, 신고사항, 시지정문화재의 공개, 관람료의 징수, 직권에 의한 조사 등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년 10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9월 29일 조신행 의원외 5인
2. 회 부 일 자 : 2003년 9월 29일
3. 상 정 일 자 : 제1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3.10.6)
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조신행 의원

1. 제안이유

- 가. 현재 300명으로 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인수를 100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 하고
- 나. 열린 감사를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2조)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손성도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본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시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열린 감사를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에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Ⅳ. 토 론 요 지 생 략

Ⅴ. 질의답변요지 생 략